

2008년과 2009년의 친디아의 10대 이슈 중점분석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과 인도의 주요이슈 점검

2008년은 중국이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고도성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주 유영을 성공하는 등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멜라민 파동으로 각 국 정부들은 멜라민 함유 식품 제거에 혈안이 되었고 분유에 대한 주부들과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한동안 큰 이슈로 자리잡았다.

한편 2008년 인도에서는 핵발전을 통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서 탈피하고자 미국과 민간 핵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조인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과 방화, 파괴, 폭탄 테러가 난무해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다음은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친디아 10대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중국의 2008년 이슈

▶ 올림픽 개최로 고도성장 과시

베이징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중국팀은 금메달 51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8개로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었다. 특히 개폐막식에서는 수천 년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지난 30년간 거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축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일본(1964년), 한국(1988년), 중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경제력을 공인 받은 셈이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이 치러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 시위 사태와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세계 여론이 악화되었다. 성화봉송 루트가 되었던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부를 지탄하는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테러 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올림픽을 전후로 중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과연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 미국발 금융 위기와 수출 타격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4분기(12.7%) 이후 2008년 3/4분기(9%)까지 내리 5개 분기 연속 하강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로 전이된 탓이 크다. 특히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지난해에 25.7%였고, 2005년에는 28.4%에 달했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수출증가율(1~9월)은 22%대를 기록했





다.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은 2005~2008년(1~9월)에 6.2%p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증가율 감소폭은 같은 기간 무려 19.2%p에 이르렀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4%에서 같은 기간 17.6%로 3.8%p 감소했다. 한편 수출이 줄면서 경제를 선도해가던 연안지역의 경제가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다. 수출 전진기지인 광둥성의 경우,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22.3%였지만 현재 1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해 수출 중소기업의 도산과 감산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 감소는 세계 경제 침체로 미국 등의 소비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 등 원가 부담이 늘어 수출 가격이 인상된 요인도 크다. 이에 중국 정부는 수출 둔화에 대비해 경기 부양 등 다양한 내수 확대책을 세우고 있다.

▶ 대만 정권 교체와 양안간 협력증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진당 세창팅(謝長庭)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5월20일 신임 총통에 취임했다. 대만 국민이 민진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과거 8년 동안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추구한 무리한 독립정책이 꼽힌다. 대만 독립 움직임에 중국이 무력시위로 대응하면서 대만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것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1992~2000년 8년간 연평균 6.5%를 유지해 왔으나 천 총통이 집권하면서 연평균 4.1%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천 총통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면서 민진당의 패배가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마잉주 신임총통이 취임한 후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 총통은 국민당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그동안 대만이 고수해왔던 3불 정책(접촉, 대화 및 타협 거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9월에는 중국과 대만이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11월 4일에는 59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항공, 해운, 우편, 식품안전과 관련한 4개 항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주말에 한해 36편을 운항하던 항공 편수가 내년부터 주 108편으로 늘어나 매일 운항될 예정이고, 다음달부터 중국의 상하이 등 주요 항구 63개와 대만의 타이중(臺中) 등 11개 항구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우편 교류도 현재는 등기우편만 허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우편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연이은 天災,와 人災

올해 중국은 개혁개방 30주년과 올림픽 개최라는 큰 경사를 맞기도 했지만, 어느해 보다 많은 인재와 천재에 시달려야 했다. 새해 벽두인 1월에 우루무치 대형 화재로 5명이 숨진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50년만에 최악의 폭설로 133명이 숨졌고, 3월에는 티베트 라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중국 정부가 탱크와 군인을 동원해 진압했다.

4월에는 산둥성 즈보(淄博)에서 안전의식 부재와 현장관리 소홀로 대형 열차 참사가 발생해 70여명이 생명을 잃었다. 5월에는 쓰촨성 원촨(汶川)에서 진도 8.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 7,1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6월과 7월에는 구이저우, 상하

이 등지에서 부패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대규모 유혈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8월에는 신장에서만 네 차례 테러가 일어났다.

9월에는 쓰촨성의 판즈화에 대형 지진이 강타해 38명이 숨졌다. 이런저런 재해 수습으로 1년 내내 시달린 셈이다. 특히 이 중에서 2월의 폭설과 5월의 쓰촨 대지진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 효과가 컸다. 폭설로 중국 중부와 남부를 관통하는 철도, 고속도로, 항공 교통이 거의 마비되어 전력이 중단되거나 공급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폭설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해 식료품이 크게 부족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비상위기라고 선포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다.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은 주변의 산시, 충칭, 간쑤 지역을 포함한 총 44만km²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인프라와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이재민만 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수백억 달러이며, 경제성장률에도 0.5%p 정도 감소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멜라민 파동

지난 9월1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올해 3월부터 10개성에서 발생한 신장결석 젓먹이 환자가 80여 명에 달했고, 특히 간쑤성 영아 1명이 신장 결석으로 사망했음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또한 란저우시 병원은 이 병원에 신장 결석으로 입원한 영아 환자 16명이 중국 최대 분유업체인 썬루의 분유를 먹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세계를 중국산 유제품 공포로 휩싸이게 한 멜라민 파동이 시작되었다. 최근 중국 보안당



국은 멜라민 분유 피해 아동수가 29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멜라민 파동에서는 멜라민 자체의 위해성은 물론, 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당국의 자세와 구멍 뚫린 국가 식품안전 시스템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중국산 저질 분유로 인한 유아 사망 사건은 이미 2004년 4월에 발생한 적이 있다. 안후이성 푸양(阜陽)시 유아 13명이 영양성분이 없는 기준 미달의 가짜 분유를 먹고 숨졌으며, 200여 명이 대두증이라는 합병증에 시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관계자 97명을 형사 처벌하고, 분유생산업체 54곳을 폐쇄했고, 후속 조치로 식품안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4년 만에 유사 사고가 재연된 것이다. 이번에도 썬루그룹이 소재한 스자좡시 정부가 올해 3월에 이미 멜라민 분유 문제를 인지했으나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음이 밝혀졌다.

결국 중앙정부는 품질감독국장(장관급)과 스자좡시 당서기를 경질하고 6명을 구속하였으며, 원자바오 총리가 국제 사회에 사과하는 사태까지 갔으나 아직 식품안전체계를 수립할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멜라민 파동은 각종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 개혁개방 30주년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79년 12월 18일 베이징,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에 의해 숙청당했던 덩샤오핑이 제1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3차 중앙위원회에 부총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덩샤오핑은 이 자리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펼 것임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이로써 중국은 현재 세계 4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후 당정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제1보로 미국과의 수교(1980.1.)를 결정하고, 이후 경제특구설치(1980.8.), 국유기업과 농촌에 책임경영제 도입, 주식시장 개설 등 개혁정책을 도입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는 등 곡절도 있었으나, 상하이를 기반으로 둔 장쩌민을 총서기로 발탁하여 남순강화(1992.1.)를 펼치면서 개방정책을 이어나갔다.

이후 중국은 WTO 가입(2001년)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했다.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가 등장한 것은 2002년 11월 이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가 양적 성장, 동부연안을 우선 발전시켜 부를 과급하려는 선부론(先富論)을 키워드로 삼았던 반면, 후진타오는 질적 성장과 모두 잘 살라는 균부론(均富論)을 국정 방침으로 세웠다.

한편, <물권법> 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개혁개방을 계속하고 있다. 개혁개방 천명 후 30년이 지난 2008년 10월, 베이징에서는 제7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3차 중앙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성대한 축제가 되어야 할 이 회의에서는 국제 금융 위기에 대응한 경제 안정 방안, 멜라민 파동을 비롯한 식품 안전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다.

▶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오랜 고도성장 끝에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자산시장의 두 축인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전년 10월 최고점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져 2006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주가의 하락세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된 데에서 비롯됐다. 이후 대내외 기업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실적 둔화와 비유통주 물량 출회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산시장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시장도 하락세가 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던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올해 2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더욱 위축되었다. 부동산시장 대란설의 진원지인 광둥성의 선전과 광저우의 부동산가격은 연초 대비 30% 이상 폭락했고, 지난 7, 8월 상하이의 부동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8%에 달하는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다. 베이징의 주택거래 건수도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러한 자산가치 하락은 가계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을 가속하면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인플레이션으로 '안정적 고성장' 기조 흔들

2007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 고성장'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6년 연간 1.5%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하반기에 6%대로 상승했으며 2008년 2월에는 상승률이 8.7%(전년 동월 대비)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시중유동성 억제 조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때마침 불어 닥친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총수요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2월을 고비로 둔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6%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할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의 동시 억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되 경제 성장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9월에 9.1%를 기록하는 등 아직 물가상승압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국부펀드의 해외 진출 붓물

200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7년 9월에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하였다.

중국투자공사는 출범 이후 주로 미국 금융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2007년에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각각 30억 달러와 50억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2008년 들어서는 VISA카드의 IPO에 참여하고 JC플라워스와 사모펀드 공동 설립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외환보유고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외환관리국(SAFE) 역시 2008년 들어 영국 BP 및 프랑스토탈 등 석유화학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고 호주 대형은행들의 지분 인수에 나서는 등 활발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국부펀드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미국, EU, 호주 등은 자국 전략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부펀드의 투명성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는 IMF 주도로 국부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 위기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중국투자공사에 대한 AIG와 시티그룹의 부분 또는 전체 매각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알려지는 등 중국 자본의 국제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주 유명 성공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은 2008년에 또 하나의 국가적 대사(大事)를 치렀다.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자체 기술로 우주 유명에 성공한 것이다. 베이징올림픽과 개혁개방 30주년에 맞춰 우주로 날



야간 선저우 7호에 탑승한 우주인 세 명은 중국 우주탐험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시도했다.

우주 유영은 9월 27일 지구 상공 343km 궤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장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다. 선저우 7호 선장인 자이즈강(翟志刚)은 이날 오후 4시 41분경에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서 나와 4시 58분까지 17분간 우주유영을 진행했다. 중국 우주인은 안전 로프로 연결된 우주복을 입고 궤도 모듈에서 나와 우주선에 부착된 태양전지 기저막 재료와 저지구궤도 고체 윤활재료 등 각종 실험 재료와 장비를 회수하고 난 뒤 궤도모듈로 안전하게 귀환했으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를 흔들며 중국 우주항공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한편 중국은 유인 우주탐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우주 유영에 성공함으로써 2017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2020년에 독자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2009년 예상이슈

▶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인프라 확대 등에 총 4조 위안(5,860억달러)을 투자하는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이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11.9%를 기록했으나 2008년 3/4분기에는 9.0%까지 하락했다.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7~8% 이상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8%대 성장률 진입이 임박했음은 경제의 위

기 징후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자율 인하, 대출규제 완화 등 통화정책을 비롯하여, 수출 지원정책과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정책을 전면적으로 펴면서 경기 급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2009년에 8~9%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미국 금융 위기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경기의 침체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해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미·중 금융협력 가속화

중국과 미국의 금융협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금융 개방, 위안화 절상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우월한 위치에 선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양국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미국의 금융 불안 해소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미국 지원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협력은 △중국이 보유한 달러를 동원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미국은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다시 회수한 돈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중국의 국제 금

용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중·미 관계는 보다 우호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양국은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 금융기구 체제 개선, 국제 통화체제 개선 등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제 금융감독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1인당 GDP 3,000달러 시대 개막

지난 30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1978년 약 2,165억 달러에 불과하던 GDP는 2007년에는 3조 3,472억 달러로 15배 이상 늘었고, 224.3달러이던 1인당 GDP도 지난해에는 2,533.3달러로 11배로 증가했다.

이르면 내년에 1인당 GDP 3천 달러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정치사회학자들은 GDP 3천달러에 이르면 민주화 요구가 급증하면서 사회가 혼란을 치르게 된다고 본다. 중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10월, 안후이성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인 왕자오진(王兆鈞)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윈자바오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다당제 민주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12월에는 난징(南京) 사범대 귀취안(郭泉) 교수가 집권을 목표로 하고 다당제를 정강정책으로 한 중국신민당 설립을 선포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정부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기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이미 지난해 지니 계수가 0.496에 달할 정도로

중국의 소득 분포 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높다.

또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패 감시 종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면 사회불안이 증폭하면서 민주화 요구나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최근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반해 투자와 순수출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 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의 합계)의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62%에서 2007년 51.4%로 하락한 반면 고정자본형성 및 순수출의 GDP 비중은 2000년에 각각 35.1%와 2.4%이던 것에서 2007년에 44.2%와 9.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첫째 과도한 투자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의 문제이고 둘째, 과도한 대외불균형이 초래하는 제반 문제들(통상압력 증대, 과잉 유동성 등)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 성장하려면 투자와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장려 등 개인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 결과 2008년에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재 소매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소매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06년 13.7%에서 2007년 16.8%, 2008년 1~10월에는 22.1%로 계속 상승했다.

향후 소비가 투자와 수출을 대체하며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경제의 구조 변화와 깊이 관련된 주제이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2008년에도 중국 정부는 법제화 완비를 위해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였다. 먼저 가공무역 금지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에너지절약법>, <수질오염 방지법>, <순환경제촉진법> 등이 제정되었다.

결국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고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기업들은 환영 받지 못하는 경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이런 법규 제정뿐만 아니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노무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방직업계에서는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상반기에만 1만여 개 기업이 도산했고, 현재 업체의 3분의 2 가량이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10월에는 최대 완구업체 허쥘그룹이 미국발 금융 위기 영향으로 광둥성 동관지역에 있는 2개 공장을 폐쇄해 직원 6,500명이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과 다르다. 이전 같으면 '사회 안정'이 중시되었을 테지만, 지금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인대는 제11기 상무위원회에서 <기업국유자산법(2009.5.1. 실시)>을 10월 28일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어, 국유기업 간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법률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 이득과점을 형성한 철강, 항공, 전력, 통신 부문에서 빅딜이 확대될지가 향후 관심거리다.

▶ 자산가치 불안 지속

세계 경기 후퇴로 2009년 상반기 경기 하락과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른 시일에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 의존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이로 인해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볼 때, 중국 증시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4조위안의 '중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등 향후 증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부동산 경기 또한 대출 규제 지속, 주택구입 심리 위축 등으로 당분간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업계의 자금 긴축 추세가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2009년 말까지는 조정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DTZ 또한 중국 부동산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향후 1년 이상 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도시 인구가 매년 2천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도 최근 다시 커지고 있어 부동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동력을 내수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를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외교 역량 팽창

최근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는 '올림픽 이후 국제 형세와 업무보고'라는 보고를 통해 중국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실제로 204개국이 참가한 올림픽 기간에, 세계 정상급 인사 130여 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화민족주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켰다.

이전에 중국의 외교는 ‘때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스타일이었으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할 바를 하는’ 외교로 변하고 있다. 즉 이전에 중국의 외교 역량이 발전도상국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팩스 시니카를 추구하는 ‘신흥 대국’의 면모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념적, 정치적 외교에 치중했던 중국은 2005년에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후 칠레(2005), 파키스탄(2006), 뉴질랜드(2008.4.)와 FTA를 체결했고, 최근에는 싱가포르(2008.10.)와 FTA를 성사시켰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자원 외교를 펴고 있다. 2000년에 아프리카 주요 정상을 모두 베이징에 초청해 중국-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한 이후 3년마다 포럼을 갖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에 채무 탕감과 차관 제공을 하면서 자원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은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 경제 희생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이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중국의 외교 역량이 주목 받고 있다.

▶ 양안 관계 우호적으로 발전

지난 11월4일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은 오랫동안 숙원이던 통상, 통신, 통우(通商, 通航, 通郵)를 일컫는 ‘3통’에 합의함으로써 양안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당장 연간 500만명에 달하는 양측 상호 방문자



(2007년 대만인 462만명, 중국인 23만 명)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인력과 물자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대만은 이미 중국에 10만여 개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만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자본에 대만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대만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 남부,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싱가포르까지 포함하는 범중화 경제권의 거대 시장 탄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과 대만은 과거 10년 동안 정치 상황이 나빠도 경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이제는 정치 관계가 경제 협력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 점은 최근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한 관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 오바마 시대, 북-중 관계 변화 예고

중국은 북미 관계 개선 전망에 상응하여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직접대화를 주장해 온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현실주의’를 기조로 한반도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려 할 것이다.



오바마 개인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철저한 북핵 감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임을 밝혀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중시 전략을 펴며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미간 직접대화가 강화되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의 6자회담 의장국 위상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 정부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과거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반도의 정치경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주도권을 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북한 투자는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북한 공산품의 80% 이상이 중국산이다.

앞으로도 열악한 투자 여건 때문에 당장 선진국들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북사업 경험을 축적한 중국은 투자,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 중국 제품에 대한 불안 심리 지속 가능성

여전히 진행 중인 멜라민 파동은 식품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와 더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중국산 재료가 들어간 농수산물, 생활용품(비누, 샴푸), 동물 사료 등을 팔지 않겠다는 ‘차이나 프리(China Free)’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온라인에서 특정 상품에 국한해 일어나는 ‘차이나 프리’가 오프라인에서 팔리는 다양한 품목의 제품에까지 번진다면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저항의 대표 사례는 2007년 8월에 발생한 납 함유 중국 장난감에 대한 리콜 조치이다.

중국에서 제작된 바비 인형, 보이스카우트 배지, DEG가 함유된 치약, 구슬 장난감 빈디즈 등은 2007년에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리콜 조치를 당했다. 문제는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산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 세계 완구류 중 중국산은 80%에 달하며, 마텔사 장난감의 65%가 중국산이었다. 지난해에 발행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 보기』의 저자가 내린 결론 역시 중국산 없이 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발행된 『차이나 프라이스』는 중국의 저가품 생산 시스템이 독성 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기업윤리와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멜라민 파동 후, 11개국이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 금지한 바 있다.

□ 인도의 2008년 이슈

▶ 인도-미국 민간 핵 협정 조인

인도는 핵발전을 통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서 탈피하고자 미국과 민간 핵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

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이를 두고 인도 국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수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지난 10월 10일에 워싱턴에서 양국 간 민간 핵 협력 협정(일명 123 협정)이 조인되었다.

2006년 3월에 마련된 이 협정의 기본 틀은 군사용 핵 시설과 민간 핵 시설을 서로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하에 두는 대신 미국이 민간 핵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으로 미국이 1974년 이래 시행해 온 인도에 대한 핵거래 제재조치가 해제되었고, 인도는 핵 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의미는 이번 협정으로 인도가 고질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인도의 발전 총량은 14만MW로서, 그중에서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인도가 앞으로 매년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2030~2040년경에는 약 80만 MW가 필요한데, 핵발전 없이는 이를 조달하기가 어렵다. 수력이나 풍력 혹은 바이오연료나 천연가스에 의한 전력 생산은 전체 소요량의 2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화력발전은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환영 받지 못한다.

그동안 인도는 우라늄 원료 부족과 기술 부재 때문에 핵발전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랑스는 자국 기업들이 인도에 핵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전망이다.

▶ UPA연정, 신임투표에서 승리

인도-미국 핵 협정에 줄곧 반대해 온 좌파세력들

은 7월8일에 핵 협정을 위한 협상을 중지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빠지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좌파 세력이 연정에서 빠지면 집권 여당인 UPA연정의 의원수가 총 226석으로 줄게 되어 과반인 271석에 크게 모자라게 되며, 새로운 신임투표가 불가피해진다.

신임투표를 앞두고 인도 정가에는 각종 권모술수, 모략, 의원 매수가 횡행했고, 정작 핵 협정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7월 22일 벌어진 신임투표 결과, UPA연정은 총 541표 가운데 275표를, 반대파는 256표를 얻으면서(기권 10표) 재신임에 성공했다.

야당 표 가운데 15표가 이반한 결과였다. 그러나 UPA연정의 이미지 타격은 매우 컸다.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매수하려 한 증거라며 돈다발을 들고 나와 인도국 민의회당(INC)과 SP당을 비난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는 등, 신임투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국민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투표로 UPA정권은 좌파 세력과 연합하지 않고도 정권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어, 남은 임기 동안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선거가 계속되고 총선도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은 가급적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 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한-인, CEPA 및 인도-아세안 FTA 체결임박

지난 9월 인도의 고팔 필라이 상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인도 협상단과 한국 협상단이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쟁점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로써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도는 제3국 상품이 한국을 통해 인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원산지 규정을 쟁점화했고,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허용되지 않는 부분만 나열) 방식을 주장해 왔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다.

현재 양측은 사실상 협정문을 작성한 상태이지만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양허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으며, 가능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 간의 FTA 또한 오는 12월17일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 타결로 양자 간에 교역되는 재화의 8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교역규모는 2010년까지 약 120억 달러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아세안 FTA는 재화의 교역만 포함하고 서비스나 투자 부문 협상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약 12억 명의 인구와 2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를 가진 시장권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3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NDA연정에서 처음 시작한 이번 협상은 타결까지 무려 6년여를 끌 만큼 난항을 거듭했다. 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도는 무역강국으로 도약할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다.

▶ 경제 성장, 뚜렷한 둔화 조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세계 각국을 돌아 인도에 영향을 끼칠 조짐이 확인하다. 당장 환율이 크게 변동했다. 인도 루피화는 지난 10월27일 달러당 50.29 루피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올해 초와 비교해 무려 20% 절하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주식시장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88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으며, 주가 또한 크게 폭락해 올해 1월

21206을 기록한 SENSEX지수는 10월24일에 8,702까지 떨어졌다.

이날 일일 하락 폭은 10.96%로 사상 두 번째로 컸고, 주가 수준은 2006년 11월 이래로 가장 낮았다. 대외 부문 실적 또한 좋지 않다.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올해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약 5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공세와 함께 외환보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난 5월 23일에 3,160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가 10월 31일에 2,530억 달러가 되면서 6개월 사이에 600억달러가 감소했다.

도매물가지수는 고유가, 루피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9월 한때 12.1%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유가 하락,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11월 첫째 주에 8.98%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에서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인도의 연구기관인 NCAER, CMIE를 비롯해 외국의 IMF 등도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수치인 9%를 밑도는 7%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 주춤

2007년 타타스틸의 코러스 인수, 힌달코의 노벨리스 인수와 같이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도 기업의 대형 해외 M&A가 2008년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올해 3월에 발표된 타타자동차의 재규어와 랜드로버 인수는 총 거래규모가 23억 달러에 달했으며, 6월에는 인도의 대표적인 복제약 전문 업체인 란박

시가 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이치 산교에 2,558억 루피(약 53억 달러)에 팔렸다. 하지만 이처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대형 M&A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유탄을 맞으면서 급격히 줄었고,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인도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인수 합병은 총 676건, 거래규모는 511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누계 건수 및 거래금액은 각각 381건, 26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527건, 493억 달러에 비해 28%, 46%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인수자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올해 3월 재규어와 랜드로버를 인수한 타타자동차의 경우 매수 자금으로 끝나다 썼던 브릿지론(Bridge Loan)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7년 64억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노벨리스를 인수했던 힌달코 또한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타자동차는 매수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목적으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었고, 발행 예정가를 보통주 기준으로 6.8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11월 26일 현재 주가는 달러 기준으로 2.82였다. 힌달코 또한 발행 예정가가 1.92달러였으나 현재 주가는 1.06달러에 불과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호전되지 않으면, 과거 높은 비용으로 인수합병에 나섰던 기업들은 더 싼 값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높은 이자를 주고 차입에 나설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테러 확산, 종교 갈등 재연

올해 인도에서는 폭력과 방화, 파괴, 폭탄 테러가 난무했다.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힌두교와 무슬림

간 갈등 외에 힌두교와 기독교 간에도 갈등이 고조되었고, 낙살라이트(Naxalite)라고 불리는 과격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을 습격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인도 전역에서 자행된 폭탄 테러로 발생한 인명 사상자도 매우 많았다.

6월과 7월에는 전통적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의 정부가 힌두교 성지 손해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목을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로 약 400km² 정도를 한시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무슬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결국 취소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죽거나 다쳤으며, 방화나 약탈로 피해를 입은 건물도 많았다.

8월과 9월에는 힌두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져 기독교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오리사주 칸다말(Kandhamal) 지역에서 힌두교 지도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사건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현지에서 급속히 번지면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력이 자행되었다. 기독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은 BJP당이 집권하고 있는 카르나타카주로 다시 번졌다.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개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낙살라이트는 올해 초부터 오리사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해 경찰을 사살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웨스트벵갈주의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탄공격을 저질렀다.

올해 자행된 폭탄 테러만도 약 64회이고, 7월에 아메다바드, 9월 델리, 10월에 아쌈 지역 테러 등



백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테러도 적지 않았다. 테러의 절정은 지난 11월 26일에 뭄바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였다.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22명을 포함해 183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테러로 인도 경제와 외국인 투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대형 프로젝트, 사회·정치적 소요로 표류

인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 타타자동차의 나노 생산과 릴라이언스그룹의 경제특구 건설은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프로젝트였지만, 두 사업 모두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타타자동차는 웨스트벵갈주 싱구르 지역에서 약 4천 km²의 땅을 확보해 초저가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역 정당인 트리나몰콩그레스의 당수인 마마타 여사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주민들의 소요에 개입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결국 타타자동차는 웨스트벵갈에서 철수하고 구자라트주로 생산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산기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타자동차가 입을 손실은 약 70억 루피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 차질까지 감안하면 손실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릴라이언스그룹 또한 부지 매입으로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릴라이언스그룹은 마하라슈트라주의 라이가드 지역에 1만 km²가 넘는 규모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예비인가(In-principle Approval)까지 받았다.

하지만, 건설 예정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45개 이상, 이주 대상이 10만 명 이상 되면서 주민 소요가 예견되었다. 실제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 마하라슈트라주의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고, 투표 결과 90%가 프로젝트에 반대표를 던져 사실상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고아(Goa)주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경제특구 8개를 취소했고, 자르칸드주에서도 BPSL의 현장 담당 임원이 현지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다.

▶ OBC(기타후진계급)에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할당

현 집권 여당인 UPA연정은 2005년 <93차 헌법수정안>과 <중앙교육기관 입학할당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중앙정부 소속 교육기관 입학 정원의 27%를 기타후진계급(OBC)에 할당한다고 공표했다.

해당 교육기관으로는 인도의 대표 공과대학인 IIT와 경영대학원인 IIM 등이 있다. 당시 이 결정에 상위 카스트들이 격렬히 반대했고, 결국 인도 대법원이 본 법안을 심사하기로 하면서 잠시 시행이 유보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2008년 4월에 인도 대법원은 이 법안을 최종 인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OBC들 중에서 부유 계층(일명 creamy layer)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부유 계층이란 경제적인 상위층 집단을 말하는데, 이들은 충분히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할당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로써 중앙정부 소속 고등교육기관 입학 정원에서 특별 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총 49.5%가

되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할당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17%, 지정부족(Scheduled Tribes) 5.5%였다.

한편, 공직이나 공공기관의 취업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49.5%의 특별 할당이 실시되어 왔다. OBC 계층은 인도 전체 인구의 40~50%로 선거에서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비록 입학정원 할당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만모한 싱 총리는 민간기업에까지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 대규모 농민 부채 탕감책 발표

지난 2월29일에 발표된 2008년 예산안 중에서 농민 부채 탕감책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탕감책의 내용은 20km²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 농민들이 국영은행 혹은 그 협력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한해 채무를 면제해 주며, 이를 위해 6천억루피(약 14조4,000억원)를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6,000억루피는 2008년 재정적자 추정액의 반이나 되는 큰 금액이다. 더구나 5월에는 20%가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7,168억루피로 조정되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겪는 와중에서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만도 했지만, 야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2009년에 총선이 있고 올해에도 지방선거가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채로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등 농민 부채는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부채 탕감책은 농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개인 부채를 탕감하지 않아도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를 일으킬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단발적인 채무 탕감이 인도 영세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영세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의 절대 규모가 너무 작아 앞으로도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에 투자를 늘려 산업을 유치하고 수익이 나기 힘든 농업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산업 고용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무인 달 탐사선 발사

인도가 우주 탐사에 있어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10월 22일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찬드라얀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11월 14일에는 찬드라얀1호로부터 달 착륙 탐사체가 분리되어 성공적으로 달 표면에 착륙했다.

이로써 인도는 러시아, 미국,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다.

임팩터를 통해 달 표면에 착륙하는 이번 달 탐사체는 75파운드의 무게에 박스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달에 충돌하기 전의 영상을 촬영할 장치와 달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하강 속도를 측정할 레이더 고도 측정기, 달의 대기를 측정할 질량분석기 등이 실려 있었다.

찬드라얀1호는 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한 5가지 장비 외에 미국, 독일, 영국 등이 개발한 6종의 장비를 탑재해 앞으로 2년간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표면의 정밀 지도와 광물, 화합물, 지도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



로 달 탐사에 나선 국가가 되었다. 현재는 2~3년 후에 발사할 찬드라얀2호를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화성탐사선을 보낼 계획도 갖고 있다. 기초과학 강국인 인도는 이제 우주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 인도의 2009년 예상이슈

▶ 총선에서 정당 간 연합 구도 지속

인도의 정당 정치는 1990년을 지나면서 인도국민의회당 (INC, 이하 국민의회당)이 독점해 오던 일당 체제에서 벗어나 다수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했다.

현재는 국민의회당과 BJP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외에 35개 군소 정당들이 정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회당은 현재 의회 의석의 29%, BJP는 24%,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47%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큰 규모의 정당인 국민의회당과 BJP 모두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국민의회당은 네루 일가의 명성에만 의지한 채 뚜렷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BJP는 힌두극우주의 세력에 기댄으로써 무슬림과 기독교 세력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연정 구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총선결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정당 간 연합체로는, 현재의 집권 여당인 UPA, BJP가 중심이 된 NDA, 그리고 BSP, TDP, JD로 구성된 제3연합이 유력하다.

현재 집권 여당인 UPA 연정에서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던 좌파 연합세력이 신임투표 과정에서 이탈해 나갔고, 좌파 세력들이 BJP와 연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3연합과 좌파

가 연합하여 정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주변국과의 관계, 긴장 조짐

파키스탄의 경우 올해에 9년 만에 군부 통치가 끝나고, 자르다리(Zardari) 대통령과 길라니(Gilani) 총리가 이끄는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

인도로서는 군부 강경파와 상대할 일이 적어져 다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잠무&카슈미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에서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파키스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뭄바이 테러공격 이후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로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테러 대응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교역 규모가 늘고 상호 협력 분위기도 강화되는 분위기이지만, 국경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 잠재적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는 올해 군주제가 무너지고, 프라찬다(Prachanda) 총리 정부가 들어섰으며 마오이스트들도 정부에 참여했다. 인도는 네팔의 신 정부를 경계했으나, 지금은 비하르주에 홍수를 불러왔던 코시강 범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관계도 미묘해졌다. 2008년 인도의 일부 폭탄 테러 주동자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무단 입국한 자들로 밝혀지면서,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테러 본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테러를 기도하는 무단 입국자 문제를 두고 양국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타밀 타이거(LTTE) 반군 문제로 시달리는 스리랑카에서는 10월에 교전으로 타밀계 사람들이 10여 명 사망했다. 타밀나두주의 지역 정당인 DMK는 인도 정부에 개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로써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와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UPA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DMK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으며 앞으로 스리랑카와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 오바마 시대, 인도-미국 협력관계 변화

벼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인도 각 기관은 향후 인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길 원하며 인도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지위 또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고, 부시 행정부와 인도 간에 체결된 민간 핵 협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몇 가지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에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는 미국의 주요 아웃소싱 거점인 인도가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인도의 2007년 소프트웨어 수출(IT, BPO포함) 실적은 400억 달러였는데, 그중 60%가 미국 수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싼 오바마의 입장 또한 우려 대상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탈레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파키스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문제에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카슈미르 문제에서 파키스탄 편을 들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파키스탄과의 양자 협상으로만 카슈미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인도로서는, 미국의 개입 언급이 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국 간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인도-미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접어든 때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다는 점 역시 이런 기대를 낳고 있다.

▶ 일본과의 FTA 타결 전망

일본이 2007년에 인도에 투자한 금액은 15억달러이다. 이는 인도에 투자한 국가 중 6번째 규모이다. 일본의 경제력에 비하면 인도에 투자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와 일본은 2009년에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타결을 통해 상호 교역규모를 200억달러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연내에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몇 가지 쟁점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09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일본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인도는 일본이 투자하기보다 부품을 무관세로 인도에 수입하는 데 더 열중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인도 정부는 일본에 의약품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쟁점 사안은 있으나, 인도와 일본의 산업 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면이 많고 일본이 한국과 아세안국가보다 월등히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장률 6%대로 하향 전망**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년 인도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다. 부동산 건설이 침체되면서, 연쇄적으로 시멘트, 철강 등 소재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동차와 가전 제품과 같은 내구소비재 산업의 성장세도 주춤한 상태다.

먼저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여서 2009년 하반기까지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정부 지출 역시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큰 폭의 지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말 치담바람 전재무장관은 당초 목표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인 3%를 달성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농민 부채 탕감, 제6차 공무원 급여인상위원회의 인상안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물가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수가 크게 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인 만큼 정부 지출로 소비를 진작시키기도 어려워 보인다. 투자 부문에서도 인도 내 철강사들의 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 연기 또는 보류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회복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올해보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

대외무역 부문에서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액이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올해 무역수지가 이미 크게 나빠진 상태이다. 내년에 비록 수출이 부진하더라도 유가 하락으로 수입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이 7%대로 하락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6%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은 5%대까지 낮추고 있다.

▶ **보험 및 유통업종의 FDI 활성화**

최근 인도의 보험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전체 국민의 15%에 불과하다. 인도 정부는 공기업들 위주로 구성된 현재 보험 시장 구조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보험법 수정안 2008'을 제정해 민간 보험업계의 외국인 지분률 제한선을 기존 26%에서 49%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2009년에는 많은 외국 자본이 인도 보험업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인도에 설립된 ICICI-푸르텐셜, ING-Vysya와 같은 유형의 합작법인들이 다수 출현할

전망이다. 현재 인도 보험시장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2009년에는 약 6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9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주목 받는 산업분야는 유통업이다. 제6차 중앙급여조정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기업의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민간 부분의 급여 또한 크게 인상되었다. 이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국내 유통업체의 역량만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수준 높은 관리기법과 유통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에는 현재 51%를 상한으로 규정해 놓은 단일 브랜드 유통업에 대한 FDI 한도를 100%로 올리고, 외국 자본이 복수 브랜드 유통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실적과 고용 악화 불가피

현재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 기업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실적 악화에 대비해 직원을 감축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인도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는 시작되었다. 제트에어웨이즈는 승무원과 직원들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정치권은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현재 눈치를 보는 기업들도 조만간 실적 악화를 구실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들도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씨티그룹은 인도에서만 1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직화된 부문으로 분류되는 영세사업장의 사정은 더 나빠, 구자라트에서 섬유업종에 종사하는 이들 중 50만~70만명은 이미 생산 주문 감소로 휴무 상태이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 악화 추세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도의 증권 분석가들은 경쟁적으로 BSE SENSEX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2009년도 이익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며,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팽배한 만큼 내년도 기업의 실적과 고용 사정은 올해 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 각종 개혁법안 의회 통과 기대

지난 7월 신임투표를 계기로 현재 집권 여당인 UPA연정에서 좌파 세력들이 탈퇴하기 전까지, 정부 여당이 추진한 각종 개혁 조치들은 좌파 세력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좌파 세력이 연정에서 이탈한 지금도 정부 여당의 개혁 작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의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로는 '토지수용 수정법안 2007', '주민이주 및 보상법안 2007', '광산 및 광물자원 법안 1957', '광물 자원 양도 법안 1960', '광물자원 보존 및 개발에 관한 규정 1988', '연금기금 규제 및 발전권한 법안 2005', '은행업 규제 수정법안 2007' 등이다.

이 법들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와 경영 환경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했지만, 정치 세력 간의 눈치보기와 당리당략 때문에 손보지 못했다. 다만 2009년 5



월경에 실시될 총선이 끝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총선 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려 할 것이고 이에 맞추어 관련법들도 신속히 처리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인도 경제 또한 타격을 입고 있어서,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서 안정된 정권이 수립되지 못하고 여러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이 되풀이된다면, 개혁 법안 통과도 물거품이 될 소지가 있다.

▶ 사회 갈등 지속

올해 있었던 테러, 종교, 카스트, 지역 갈등, 그리고 낙살 라이트 활동이 내년에 가라앉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총선을 기점으로 더 폭발할 개연성이 크다.

2002년 구자라트 사태는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한 대표적인 예인데, 당시 힌두극우주의자들이 무슬림과의 갈등을 조장해 결국 힌두극우정당인 BJP가 주 의회 선거에 승리하였다. 비록 표면적으로 무슬림과 힌두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기독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움직임이 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MNS당은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의 50~80%를 마하라슈트라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며 집권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철도청 직원 채용 시험 중에는 타 지역, 특히 북부 출신 수험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부 지역의 주들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역 차별을 마하라슈트라주가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으며, 북부 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는 또 어떤 이슈가 분쟁의 소지가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농촌 개발 가속화

총선을 앞두고 농촌 개발에 쓰이는 예산이 크게 늘 전망이다. 연방정부 예산에서 농촌 개발과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은 2004년에 1,600억루피(약 4조 3,000억원)에서 2005년 2,470억루피(약 6조 7,000억원), 2006년 3,100억루피(약 8조 4,000억원), 2007년 4,100억루피(약 11조 원)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농촌 지원 금액은 약 5,000억루피(약 1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는 농민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 7,182억루피가 별도로 더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 개발에 들어갈 돈은 1조 2,000억루피(약 32조 원) 가까이 된다. 이처럼 농촌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었다.

농촌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여 농민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당연히 농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농민 계층들은 인도가 최근에 거둔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인기영합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다소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민과 농촌을 위한 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